

제11호

2014.02

모심의 눈길 살림의 길

동향분석보고서

2014년 국내외 동향

종합진단

세계경제 | 한국경제 | 농업 | 정치·통일 | 탈핵 | 생물다양성

2014년 변화하는 제도

2014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전환이 희망이다: 동학농민혁명 2주갑에 생각하는 생명운동의 길

모심과 살림 연구소

목차

2014년 국내외 동향

종합진단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할 때 _2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_5

한국경제 성장을 낙관하기에는 구조적 불안 요인이 매우 크다 _ 10

농업 개방경제 확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_15

정치·통일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 미래사회에 대한 합의와 준비가 중
요해지고 있다 _23

탈핵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탈핵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_26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협약의 의미를 살려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_32

2014년 변화하는 제도 _37

2014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전환이 희망이다 _42

동학농민혁명 2주갑에 생각하는 생명운동의 길

2014년 국내외 동향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할 때

2014년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전망들을 보면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들이 많다. 올해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고 세계 에너지와 식량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침체 국면을 보이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올 한 해 수출경제가 살아나고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연초에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구조적 원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의 현상적 개선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당면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동안 채무를 발판으로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 왔는데, 이것이 미래가 확실히 전망되는 성장기에는 유효한 방식일 수 있으나, 지금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은 물론이고 기업과 가계 등 사회 전체가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체질 개선 노력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부양책 등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간 경쟁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때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가는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정치, 군사적 조직체로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핵심적인 경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핵심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충돌과 전쟁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한·중·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면에는 세계경제 환경의 급박한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세계화 될수록 국내 경제는 더욱 획일화,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기업의 성장과 국가 차원의 부의 창출이 시민들의 실질적 삶과 일치되기는커녕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자기조정적 기능과 국가의 조절 역할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주거, 교육, 식생활, 복지, 일자리, 건강 등 생활 전반의 양극화로 확장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복잡하고 그 뿌리가 깊은 만큼 기존의 경험에 의존해서 일시적인 처방에 매달릴 경우 문제 해결의 적정 시기를 놓친 채 결국 파국적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속 성장을 가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의 사회구조와 삶의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갑자기 전면적으로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특히 다가올 위기의 충격과 파장은 자립기반과 대응력이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조용한 대공황'이 파국 상태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의 영역들을 만들고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위기적 상황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내는 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강조되고 있다. 위기극복의 힘으로써 회복탄력성은 사회문화와 제도, 생태적인 영역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 자립,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은 물론이고 삶에 대한 태도와 의식의 자립이 필요한 때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낮은 생산과 소득 수준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자원 소비와 지출구조에 있다. 교육, 의료, 주택, 먹을거리 등 삶의 기본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소득을 증대시켜 지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불가능한 자원 이용을 허용하고 경쟁을 통한 과잉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보다 소비와 생활양식에서의 전환을 통해 대안의 영역들을 적극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 점에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풀뿌리 지역자치 활동과 마을공동체, 협동경제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의미들을 적극 살피고 살려낼 필요가 있다. 특히 일찍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문명전환의 이상을 가지고 생명협동운동의 길을 걸어온 한살림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보수화 행보 속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이념적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대안적인 미래 사회를 향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현명한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치 영역은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보다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역시 지역 살림살이의 일꾼을 뽑는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공방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증북좌파 척결과 민주주의 수호 논리가 정면충돌하는 데다 신당 창당을 비롯한 정계 개편까지 맞물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농업과 먹을거리, 환경, 교육, 협동, 공동체와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밀접한 주요 내용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명과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각 영역 주체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국내는 물론 세계 전체가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던 경제가 올해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나마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런 때일수록 다가올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힘을 길러야 할 때다. 가시적 성과에 빠져서 초심을 놓치고 자기 혁신을 소홀히 한 채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올 한 해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의 바탕은 결국 관성에 젖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바꿔내는 데 있다. 평안할 때 다가올 위태로움을 미리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근심과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선진국이 이끌어가는 경기 반등에 대한 전망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기 하향 기조가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며, 그 흐름을 개도국보다 선진국이, 투자보다는 소비가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과 양적완화 축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경제 중심 국가들의 경기회복 등이 선진국들의 경제를 뒷받침해서 기존의 하향 추세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으로 반등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흥국가들의 올해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등 불안정 요인들로 인해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추정 및 전망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IMF	세계	3.9	3.2	2.9	3.6	4.0
	선진국	1.7	1.5	1.2	2.1	2.5
	신흥국	6.2	5.0	4.5	5.1	5.4
OECD	세계	3.7	3.1	2.7	3.6	3.9
	OECD	1.9	1.6	1.2	2.3	2.7
	Non-OECD	6.3	5.1	4.8	5.3	5.4
IB 전망 컨센서스	세계	3.0	2.2	2.1	2.8	3.1
	G10	1.4	1.4	1.1	2.0	2.2

자료: OECD, IMF, Bloomberg 자료를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3) 2쪽에서 재인용

▶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 속에서도 지속불가능성은 상존

중국 등 거대 개도국들의 성장 감속과 소비 중심으로 성장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원자재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의 경우 올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석유 수요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이 올해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고,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통화 약세를 겪는 신흥국들이 석유 수입 확대에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북미를 중심으로 셰일혁명(Shale Revolution)¹⁾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원유 공급처의 다변화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달러화 강세가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셰일가스 개발 등에 따른 원가 하락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주요 국가들의 2014년 경제 전망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국가들의 2014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민간부문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푼 돈이 3조 달러로 미국 GDP의 20%에 육박해,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부채 상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커질 경우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수출 및 투자 개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 속에서 긴축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통합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의 등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를 통해 수출 및 소비가 개선되어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 승리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한 아베 정권의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도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이런 경기회복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는 채굴이 어려웠던 혈암(셰일)층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게 됨에 따라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 자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견이 많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의 23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고, 올 4월에 소비세가 현행 5%에서 8%로 인상되고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소비심리와 내수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바탕으로 둔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던 기조를 바꿔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고, 올해 성장률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7%대 중반의 범위로 하향 조정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들, 즉 소득 불균형 확대에 의한 사회불안, 심각한 부채 문제, 특히 GDP의 40%에 육박하는 지방 부채, 금융시스템 왜곡에 따른 그림자 금융 확대 등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중국 정부가 강하게 인식한 결과다. 반면, 중국의 성장속도 조절은 중국시장에서 일본을 재치고 수출 1위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들

세계경제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2% 고성장을 기록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절반 수준인 2.6%의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부터 성장률이 상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의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고 중국과 같은 거대 신흥국들의 성장 전략 변화 등으로 그 지속여부 또한 불확실해서 오히려 저성장의 장기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44차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 포럼)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정계와 재계, 학계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었다. 지난해까지 포럼이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는 위기 이후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와 그에 따른 정치·사회·기업에 대한 영향을 짚어보는 것이 주요 화두였다.

올해 포럼에서는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당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국가 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변화 심화', '사이버 위협 확대' 등을 들고 이것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방법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해 다보스포럼이 본 대회에 앞서 '올해의 경제사회적 10대 위험'에 대해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2014년 경제사회적 10대 위험 요인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위	미국과 일본, 주요 유럽 국가의 재정 붕괴	6위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2위	선진국 실업문제와 신흥국의 구조적 일자리 부족 등 고용 문제	7위	정치외교 문제로 국가 간 공조체제 붕괴
3위	물 부족 문제	8위	식량 부족
4위	소득 불균형 심화	9위	대형 금융사고, 금융체제 붕괴
5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국가 간 합의 실패	10위	대규모 시위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

그 내용을 보면, 올해 경제사회적 위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요 국가들의 재정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를 들고 있으며(1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불안(2위)과 소득 불균형(4위), 금융체제 붕괴(9위) 등 경제적 문제들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물 부족(3위), 기후변화 문제(6위), 식량 부족(8위) 등 생태학적 문제들 또한 주요 위기 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기후변화 합의 실패(5위), 국가간 공조 실패(7위), 정치사회적 불안정(10위) 등 위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역량의 미비 또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세계경제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제적 요인'(자산가격 붕괴, 중국 경제 둔화 등)과 '사회적 요인'(만성질환),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하게 거론되었으나, 2011년부터 '환경적 요인'(기후변화, 물 부족,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주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요인'으로 소득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제 영역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생태적 영역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위기의 영향 또한 사회와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보다 근본적이고 입체적일 필요가 있다. 

〈표 3〉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주요 통신 기반시설 취약	자산가격 붕괴	자산가격 붕괴	자산가격 붕괴	태풍, 사이클론	심각한 소득격차	심각한 소득격차	소득격차
	▽	●	●	●	◎	□	□	□
2	선진국의 만성질환	중동 불안정	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홍수	만성적 재정 불균형	만성적 재정 불균형	극단적 기후
	□	▲	●	●	◎	●	●	◎
3	오일 가격 폭등	파탄국가	만성질환	만성질환	부정부패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실업과 불완전고용
	●	▲	□	□	▲	◎	◎	●
4	중국 경제 경착륙	오일과 가스 가격 폭등	글로벌 거버넌스 갭	재정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사이버 공격	물 부족 위기	기후변화
	●	●	▲	●	◎	▽	◎	◎
5	자산가격 붕괴	선진국의 만성질환	세계화의 위축	글로벌 거버넌스 갭	기후변화	물 부족 위기	인구 고령화 관리실패	사이버공격
	●	□	●	▲	◎	◎	□	▽

참고: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13, Global Risks 2014.

성장을 낙관하기에는 구조적 불안 요인이 매우 크다

▶ 2014년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놓치고 있는 문제들

정부는 201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2.8%)보다 높은 3.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3.8%),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3.7%), 국회예산정책처(3.5%), 삼성경제연구소(3.1%) 등 국내 기관은 물론 OECD(3.8%), IMF(3.7%) 등 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게 보고 있다.

올해 2014년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다소 높게 잡은 데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과 수출 확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안정, 환율 하락과 저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등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률로 양화된 지표 자체가 가진 한계가 분명한 데다 세계경제구조 자체가 복잡한 만큼 성장률에 대한 사전 예측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장률에 나타난 지표와 현실 생활에서의 체감 정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다, 국가와 개인 영역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여기에도 저성장 기조 속에서 성장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 저성장을 지속시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출구전략을 본격화 할 경우 수출에 의존한 경제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우리

나라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이 기존의 양적 성장체제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중국 특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된 점도 우리의 수출 기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안팎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8.6%이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서 6.4%, 2000년대에는 4.5%로 낮아졌는데, 2010년대에는 3.6%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2.4% 성장에 그쳤는데, 올해 들어 다소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저성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못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저금리-저수익성'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일본식의 디플레와 저성장의 고착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말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핵심 기조로 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과 함께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력을 높이고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 양극화와 고령화의 확대와 세대 간 전이 현상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가구가 감소하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층 비중은 1990년 7.8%에서 2011년 15.0%로, 저소득층 비중은 1990년 18.4%에서 21.2%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소득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 주거 양극화, 건강 양극화 등으로 연결되고 자신들의 노후와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현상은 양극화로 인한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현재의 81세에서 더욱 늘어나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17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돌봄과 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킨다

는 점이다. 1990년대만 해도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30대 가구보다도 낮아서 연령별 소비성향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자녀 교육비 증가, 부동산 가격과 실질금리 하락 등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낮은 물가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그림자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999년(0.8%)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 통계 작성 시 시작된 196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작년 경우 저물가를 유지한 데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국제 유가 안정 등으로 신선식품 물가가 전년대비 1.3% 하락한 것이 미친 영향이 컸다. 즉 소비자물가가 안정화된 이면에는 생산 농가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올해 물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불안은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그럴 경우 물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서민경제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경제구조 전반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체제 속에서 수출과 내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게 될 경우, 19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우리도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채로 저당 잡힌 서민의 삶과 미래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데다 부채 또한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금리변동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 상당히 민감하게 충격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25조9천억 원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고채 발행도 97조9천억 원에 달해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서 가계부채 문제도 특히 심각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채무불이행자가 350만 명, 개인회생 신청자도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문제는 심각하

다. 이들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전체의 절반 정도로 가지고 있어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상당히 나쁘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워진 경제생활로 인해 알뜰 소비를 늘리고 외식을 줄이는 내핍생활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파산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에 의한 생활경제의 부담은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의 사업과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생협 조합원들로서 당장 식비 지출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생협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살림서울의 경우, 2012년 의식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조합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는 한살림 물품 이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안한 삶이 만들어내는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열망

지금 시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이 더 이상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각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를 양분화 시키고 있다. 문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정성이 사회·심리적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과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존에 대한 불안감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면서 기초 생활권 단위로 협동과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수가 3천 개를 넘어섰고, 서울시에서만 올 1월 20일 기준으로 1천 개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마을공동체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면서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내는 일도 의미는 있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참여 주체들이 협동하는 마음을 몸에 익히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생활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가 이념적 갈등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각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정치 쟁점화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협동조합기본법안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방경제 확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 2014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2014년 세계 전체 곡물(옥수수, 밀, 쌀, 보리, 수수 등)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24억 3,604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 2013~14년 세계 곡물생산량

종류	옥수수	밀	쌀	콩
전년대비 증감량	13.5% ↑	8.4% ↑	3.8% ↑	8.4% ↑

출처: 한석호 외, 2014,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4: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라서 작년 12월 국제곡물 가격이 전년대비 17.0% 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듯이, 2014년 국제 곡물 가격 또한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곡물생산량과 비축량이 늘어난 데다, 전체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최근 국제유가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옥수수 전체 사용량의 40% 이상을 바이오연료에 사용해 온 세계 1위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인 미국이 올해부터 바이오에탄올 의무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산업용 옥수수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 점도 국제곡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도 올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농업과 식량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

올 한 해 국제곡물 가격의 안정세에 대한 전망과는 별개로 농업과 식량생산을 둘러싼 구조적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제곡물의 기말재고율이 1970년대 식량파동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해오다 2000년대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²⁾ 이런 양적 위기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기상변동과 함께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 자체의 변동 폭도 커지고 있고, 그만큼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해서 곡물생산과 가격체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북미 지역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는 등 영하 30-40도의 이상한파가 몰아치는가 하면, 남미 지역에서는 영상 50도의 살인적 무더위가 나타나고, 일본은 45년 만에 최악의 눈 폭탄을 맞았다.

한편, 각종 개발로 농작물 재배면적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도 식량생산의 양적 위기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대비 2014년에 경지면적이 1.0% 더 감소해 170.2만 ha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과 농지전용 등으로 경지면적 감소가 계속될 전망이다. 농지전용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곡물생산 및 가격에는 사람들 식생활 패턴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3억 인구 대국 중국은 식량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앞서 식량 수입국으로 바뀐 지 10년이 되고, 탄수화물에서 동물성 단백질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사료용과 가공용 곡물수입이 급증해 국제 곡물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류소비 증가로 현재 세계 1위 곡물 수입국이 된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을 식량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쌀 수요가 2014년에 정점에 달해 세계 1위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에서 핵심 임무 여섯 가지 중에서 '식량안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적어도 2억 명 이상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시화로 인한 농지 감소와 농민의 도시 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 문제를 식량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에 해결하겠다

2) 한석호 외, 2014,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4: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는 것이다.³⁾

이처럼 농업과 식량생산을 둘러싼 불안정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교역 구조 또한 왜곡되어 있어 곡물가격 변동의 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제 곡물교역 구조를 보면 곡물 수출 국가는 소수인 데 반해 수입 국가는 다수여서, 수출국(생산국)에서의 공급 변화는 곧바로 국제 곡물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 곡물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밀 20.1%, 옥수수 41.9%, 콩 41.9% 등)은 매우 크다. 여기에 더해 국제곡물 시장에서 교역량은 총생산량의 15.0%(곡물류 13.2%, 유지류 24.1%) 안팎에 불과한 데다, 국제 곡물 자체가 가격에 대한 수요변화에 비탄력적인 상품이어서 생산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4년 WTO 출범으로 세계 농업이 자유무역 체제로 편입되면서 수출국의 가격 변동이 수입국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201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5.3%(사료 포함 자급률은 22.6%)로 매우 낮은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개방경제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선진국들의 높아진 압력

연초에 정부는 2014년도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해 “개방정책 기조 하에 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와 WTO 협상의 적극적인 참여 등 기본 원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등 총 10개 협정,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고, 23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국과는 작년 9월 1단계 협상을 마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와의 FTA 협상도 5년 8개월만인 작년 11월에 재개하여 한-캐나다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양자 FTA 외에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복수국 간 협상도 활발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목표로 미국 등 기존 회원국과 접촉해서 참여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관심표명 -> 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 양자협의’ 단계를 거쳐 기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본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11월에 관심표명을 한 후 연초부터 관련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이다. 미국은 올해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TPP 협상의

3) 산업연구원, 2013, “중국 내수 식품시장의 성장 전망과 대응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61호.

조기 타결 성과가 필요한 실정이며, 일본 역시 재난복구를 통한 성장의 동력을 수출 개방경제에서 찾으려 하면서 2018년까지 자유무역협정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개방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할수록 선진국가들의 통상압력도 더욱 거세지고 그 결과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우리의 권리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 작년 말 미국 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 부회장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이 한-미FTA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TPP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 재계 또한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가를 기회 삼아 한-미FTA 이행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조건으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통상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유기식품 동등성 문제'와 '농산물 원산지 검증 완화'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웬디 커틀러는 작년 말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지나친 원산지 인증 요구로 FTA에 따른 관세상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으며, 올해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은 등가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인증 제도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⁴⁾

▶ 자유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먹을거리의 자급과 안전성에 대한 위협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UR시대'를 넘어 'FTA시대'가 전개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국 농업의 자립기반은 무너지고 먹을거리 공급을 대형 유통 기업과 수입상들이 주도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면적이 크게 감소해 1970년 80.5%였던 곡물자급률이 2012년 22.6%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곡물인 옥수수와 밀의 자급률은 각각 1.0% 내외로 사실상 자급 기반을 잃었고, 콩 역시 자급률 6.4%로 일부 식용을 제외하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수입하는 곡물은 옥수수 900만 톤, 밀 400만 톤, 콩 100만 톤 등 연간 총 1,500만 톤에 달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조 6천억 원이 넘

4) 경향신문 2013년 12월 14일자

는다.⁵⁾

이런 상황에서 먹을거리의 안전성도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한-중FTA가 진행 중인데, 중국발 대형 식품 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항생제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미국 유기농소비자연합(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은 TPP가 식품안전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소비자 의식 전환의 필요성

지난해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작년 10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상황에 처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제, 식약처는 표시제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유기농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외국의 유기인증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동등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 표시가 가능했다. 따라서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됐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작년 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나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 고시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작년 말까지 표시제에 의해 적법하게

5) 한석호 외, 2014,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4: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7쪽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농업과 먹을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국민농업시대를 맞아 생산자 농민들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작년 말 농촌경제연구원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 10명 중 9명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세금부담 등)에 대해서는 갈수록 참여 의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인식도 점점 낮아져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10명 중 6명은 개방이 확대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결국 농업과 농촌을 되살려 식량 자급력을 높이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생산자 농민들만의 몫일 수 없으며 도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한살림의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우리의 주식인 쌀의 관세화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옴

올해부터 우리의 핵심 먹을거리인 '쌀'에 대한 관세화 문제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미뤘다.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2004년에는 쌀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대신 개방 시기를 10년 더 추가 연장했는데, 올해 말이면 추가연장 기한마저 종료하게 되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관세화를 유예하면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관리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관세화를 하면 국제시장변동에 따라 국내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⁷⁾

구체적으로 개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쌀 의무수입량이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경기도 쌀 생산량과 맞먹는 40만 9,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

6) 김동원·박혜진, 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38호

7) 김태훈 외, 2014, “쌀 관세화시 관세할당물량외 추가 수입가능성”, <농업전망 2014: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어 지금도 쌀이 남아 정부가 수입 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쌀 시장 개방을 늦추면 의무 수입물량만 늘어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쌀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화 하더라도 지금보다 수입량이 더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내외 쌀값 차이가 최근 2.5배 내외로 좁혀진 데다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관세율은 400% 안팎에 달해 이런 관세를 물고 는 수지가 안 맞아 수입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에 쌀 관세를 정하고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⁸⁾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쌀 시장 개방으로 수입쌀에 400%가 넘는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물론 앞으로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이들 나라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쌀값은 등락을 거듭하는데 만약 국제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관세만으로는 수입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는 점도 쌀 시장의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미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3년 86%대로 떨어졌고, 식량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주식인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자급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뤘은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것이냐, 계속 관세화 유예로 갈 것이냐를 놓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은 농업과 먹을거리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품목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와 생태학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비교 우위를 앞세운 경제논리로 개방 문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업의 해

UN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굶주림과 빈곤 해결', '식량 안보', '영양 섭취 보장', '생활 향상', '자연자원 관리',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농업과 소규모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을 '세계 가족농업의 해'로 정했다.

UN이 올해를 세계 가족농업의 해로 정한 데는 '국가별 가족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 '가족농업과 소규모농업에 대한 정보와 의사소통,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 '가족농업의 필요성과 잠재성,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세계 협동조합의 해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8) 한국경제신문, 2014년 1월 10일자

UN은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등의 활동을 '가족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농업과 소규모농업이야말로 세계 식량 안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전통적인 식량 생산방식을 보존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부양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식량의 약 75%를 12종의 식물과 5종의 동물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농업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농업과 소규모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족농업과 소규모농업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에서 농지의 80%를 차지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활동 과정에서 작물의 환경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가족농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정부의 농업정책도 기업농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농업은 현실적으로 외면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개방농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논리가 농업 분야를 지배하면서 가족농업의 설 자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농, 기업농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UN이 정한 가족농업의 해를 맞아 환경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가족공동체에 기반한 농적 문화를 되살리는 농업살림운동의 길을 적극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 미래사회에 대한 합의와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 체제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미래의 과제

지난 2년간의 김정일 추도기간을 거쳐 권력의 세대교체 작업을 마친 김정은 정권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심 수습을 통한 체제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치 행위를 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권력 2인자 장성택에 대한 숙청은 북한 내부의 권력승계 기반을 다지는 마지막 조치라 할 수 있다.

인민들의 실생활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핵심 과제로, 특히 '먹는 문제'의 해결이아말로 가장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2014년 국정계획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 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할 것을 밝히면서, 농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런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개발과 핵무기를 통한 군사력 유지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북한은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개발과 함께 핵무력을 병행 과제로 삼아 왔는데,⁹⁾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개발 목표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핵무기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확대,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데다, 줄어든 군비 부담만큼을 경제개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적 고립과 대내적 경기침체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북한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고, 북한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통일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합의의

9) 김갑식, 2013,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203.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재편과 긴장의 고조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양극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오고 있는 미국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무대로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미중 강대국 간 대결 구조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선택의 여지는 매우 좁으며,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력이나 중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도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는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과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태가 자신들의 군사무기 판매는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압박과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군사와 안보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중국 역시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지도층의 부패문제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당면 과제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등의 분리독립 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적절한 긴장은 애국심을 활용해 내부 질서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작년 말 신사참배 강행에 이어 올해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면서 보수우익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다가 오랜 경제 침체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일본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부활을 시도하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선진국가로서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되자, 군사 재무장과 보수 우익화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과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동맹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가장 밀접한 상대국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세 나라가 역사와 영토,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복잡하게 얽힌 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이 실물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세력 각축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질서 전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를 맞아서 주체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사회에 대한 비전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통일은 대박?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시선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던 남북관계 개선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고 그 긴장과 갈등이 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 등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부터 현 정부 일각에서 북한 급변사태 또는 3·4월 도발설, 한반도 위기설 등이 흘러나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꺼냈다.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현실의 복잡한 남북관계만큼 몹시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상호비방을 중단하자는 '중대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3~4월 두 달에 걸친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3월 26일은 천안함 사태 4주년이 되는 만큼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간 긴장상태가 계속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2016년 4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선거가 없어 정부가 소신껏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9월 인천아시안 게임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교류와 통일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들이 지금부터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박에 대한 환상이나 명분과 당위, 또는 불신에 바탕으로 한 증오의 측면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남북한 간의 체제적 이질성을 창조적으로 녹여내서 남북한이 서로를 살리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 생태학적 자립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통일 문제¹⁰⁾

북한의 심각한 환경파괴는 남한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통일시대를 맞아 반드시 치러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 통일 시 전체 통일비용 중 환경비용이 약 10%를 차지했는데, 우리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클 것이다.

한때 '공해 없는 금수강산', '강성대국'을 표방했던 북한이 인민들의 삶을 질곡으로 빠트리게 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학적 자립기반이 붕괴되었던 탓이 크다. 북한은 오랫동안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중화학공업을 가동시키고 산림생태계와 농업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다룸으로써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 여기에도 북한의 낙후된 생산설비와 오염처리 기반시설의 부족, 군사국가 체제와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처리능력 또한 매우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은 경제문제와 환경문제가 서로 꼬리를 물고 파괴적 영향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다. 국토의 80%가 산지인 북한에서 땔감용 벌목과 외화벌이용 목재 수출 등으로 산림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1995년 대홍수와 1997년의 대가뭄으로 식량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된 파국적 결과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결국 지금의 북한 사회 모습은, 생태학적 자립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룬 경제성장이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과 같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남한 사회 역시 식량 자급률은 22.6%(쌀을 빼면 3.7%)이고, 에너지 자급률은 4%에 불과하지만, 대외 의존형 개방경제 정책을 확대하면서 농업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소비절약과 원전(핵발전 밀도 세계 1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유지한 채 산업계의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다.

▶ 농업과 평화 체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통일사회에 대한 전망

현재 남한 사회는 정부의 농업 무시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과 도시농업 열풍이 거세고, 농민들의 친환경농업 경험과 직거래 활동 경험들 또한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다. 한편, 짧은 기간에 농업의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진 남한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농업국가로서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1970년을 기

10) 정규호, 2013, "녹색통일사회: 자연을 보전하며 미래세대와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이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생명평화미래구상 논의 자료.

준으로 남북한의 농가인구비가 각각 44.7%와 40.5%로 비슷했으나, 2007년에 남한의 농가인구는 7.1%로 급속한 탈농 현상이 나타난 반면, 북한은 36.8%로 상대적으로 농업인구 구성에 별 변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지형과 기후 조건상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짓기가 유리하지 않은 데다, 지역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농업방식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이점에서 남북한 농업인들이 서로의 조건과 특성,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일 농업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통일 사회에 대한 전망을 열어가는 데 있어 한살림이 축적해 온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과 도농 직거래 체제의 운영 경험은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지속가능한 통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비용을 기존과 같은 성장모델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쓰임새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체제의 정착은 중요한 기반이 된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인구규모 2배, 1인당 국민소득 약 20배, 무역규모 200배의 차이가 있으며, 남녀 평균 기대 수명도 남한이 12년 이상 높다. 이런 사회경제적 열세 속에서 북한은 GDP의 30%를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으며, 힘의 불균형을 핵무기, 화학무기 등 절멸적 군사무기를 통해 해결하려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생명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남한 역시 군사적 대결구조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자원배분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한의 한 해 국방비가 약 34조(세계 9위)로 북한보다 30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 여기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군사무기 수입에 써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정착을 통한 군비축소는 남북한 사회 모두를 지속가능한 방향을 체질 개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가능한 통일사회로 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걸림돌이자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핵문제다. 남한의 핵발전소와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한과의 교류 확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남한 역시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의 틀을 벗어던지고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탈핵 사회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탈핵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원전 안전을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창조경제의 하나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얼마 뒤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핵발전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한 국가의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대한 기본 인식과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 차원에서 수립되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기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애당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고민해 온 많은 전문가와 활동 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후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관행에서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전력에너지 수요를 과대 전망하면서 그 해결책을 핵발전소 확대에서 찾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부존자원이 매우 부족해서 필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표 5〉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및 수입량

구분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세계 16위	세계 13위
에너지 수입량	세계 5위	세계 6위	세계 3위

따라서 필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역할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와 전기수요가 높은 편인데, 정부는 수요관리 보다는 전력수요에 대한 전망을 높게 잡고 지금보다 발전설비가 두 배 이상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그것을 핵발전소 확대를 통해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5년까지 지금의 20.7기가와트(GW)의 두 배가 넘는 43기가와트(GW)로 높이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1차 계획에서 담고 있던 핵발전소 비중 목표 41%의 수준을 이번 2차 계획에서 29%로 낮춰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핵발전소 비중이 26.4% 수준인데 이것을 2035년까지 29%로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23기 핵발전소 외에 건설·계획 중인 11기(5기 건설 중 6기 계획 중)는 물론 추가로 최소 5기를 더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후쿠시마 핵재난 사고가 주는 교훈을 외면한 채 기존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 핵발전소 부지 조성과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대규모 송전시설 건설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희생과 갈등을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다.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 수준인데다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또한 세계 최고인 상황인 우리 현실에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은 다른 선택의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 부실투성이 핵발전소와 잦은 지진으로 커져가는 국민들의 불안감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자계약 부품 1천만 원 이상 계약의 시험성적서 1,826건 중 표본으로 선정한 245건에서 8건의 위조 시험성적서와 19건의 확인불가 시험성적서가 발견되었다. 게다가 핵발전소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외국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 또한 표본 조사를 통해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전수조사 없이 핵발전소를 재가동시키고 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최근 잦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지진도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93회 발생했다. 이것은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의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진발생 연평균 횟수인 44.5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핵발전소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자력 진흥 부서이자 핵발전소 비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발전소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 주체는 핵발전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6일 신고리 1호기 냉각재 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출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수원이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한 달 넘게 이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이 사고는 신고리·신월성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7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뒤 안전점검과 설비개선 후 재가동을 일주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과 제어봉과 함께 원자로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냉각수 장치의 고장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이중적 모습

현 정부의 핵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핵발전 안전규제의 핵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축소한 바 있고, 당선 이후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작년 9월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에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수출효자 상품으로 적극 개발해 2020년에는 명실상부한 핵발전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1월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산(Dooradarsha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인도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인도가 핵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으로 핵개발과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탈핵 사회를 향한 분명한 입장과 실천 노력이 필요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의 핵재난을 경험하면서 절대 안전 신화가 무너진 핵발전소와 핵무기

의 경계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일본의 핵무장,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불가능하게 파괴시켜 그 영향을 미래세대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핵발전소는 그 위험성만큼 깊은 욕망을 제공하고 있어 쉽사리 탈핵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에너지를 이용해 보다 많은 생산을 하려는 욕망을 핵발전소에서 자연에너지로 옮겨가는 것도 성찰해 봐야 할 부분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핵발전소 대신 태양과 바람, 물 등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 못지않게 우리의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자체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탈핵 사회는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노력 못지않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함께 찾고 만들어가는 데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의미를 살려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례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 올해 강원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

촉촉한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엮어진 생명공동체의 붕괴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1%가 사라졌다. 해마다 2만 5천~5만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20~30년 이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간과 못 생명들이 지속가능하게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산업화와 개발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등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물다양성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었다. 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9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1992년 협약이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생물자원을 많이 보유한 개발도상국과 앞선 기술력으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선진국 간에 이익 분배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별 성과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 국제협약인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0년에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가 얻은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공유하는 '나고야 의정서(ABS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논의가 많이 진전될 수 있었다.

▶ 생물다양성이 지닌 가치의 확인과 보존 노력

생물다양성협약이 나온 이후 '인류 공동의 자산'인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또한 2010년에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가 비준될 경우 앞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특허 등을 통해 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행위, 소위 '생물해적질(bio-piracy)'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물론 생물다양성이 지닌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서 유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생명공학과 의학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회사 맥킨지는 기후변화 이후 기업들이 가장 주목할 환경 분야로 '생물다양성'을 들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을 확대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다. 이런 가운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나고야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2011-2020년 전략계획'이 채택된 후, 유엔은 2010년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로 선포하고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 전략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을 선포한 바 있다.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 파악과 해결',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 압박 요인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 '생태계, 종, 유전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을 개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 '국가 또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력 향상'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최소 육상 17%, 연안과 해양 10%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15%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세부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 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의 도입

한국은 2014년 생물다양성 총회의 개최국이자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의 최초 선포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경제 및 개발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책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방 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환경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조차 부실하게 검토된 각종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채택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면서 그 부담을 생태계와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수없이 겪어 왔다. 따라서 사회제도적으로 생태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증과 평가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서 올해부터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을 연결해서 국토계획 속에 환경성을 반영하고 환경계획 속에 공간성을 보완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각종 부실 공약과 정책들이 채택되어 경제적 손실과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책실명제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해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보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책실명제에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 이력서, 각종 위원회 결정 내용, 정책 질의·응답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모두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을 위한 민간의 노력과 농업의 중요성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농업과 민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회원 6천여 명을 둔 씨드림을 비롯한 전국여성농민단체연합, 생협, 흙살림,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차원에서 토종종자의 육종과 보급 관련하여 토종 전시포 운영, 토종 잡곡 섞어먹기 운동, 토종 종자 지식 채록, 씨앗 도서관 활동, 토종 종자 보호 지역조례 제정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고,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은 카길과 몬산토로 대표되는 초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에 대응해 토종 종자 보존과 자급, 특허권에 대응하는 농부권의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잊힌 농법과 입맛의 회복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물질(GMO)은 대규모 개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북미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연계 이용되는 제초제의 남용으로 황제나비가 서식지

와 먹을거리로 활용하는 유액식물(milkweed)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황제나비가 멸종 위기에 처한 사례는 유명하다. 이 외에도 작물 간 교잡에 의한 변형 유전자의 유출, 토양 미생물상의 변화, 초식성 절지동물의 죽음, 먹이사슬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 기술은 시장 가치가 높은 유전자조작 품종만을 선택적으로 개량함으로써 품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GMO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민간 차원의 노력과 관련해서 지난해 한살림 등 생협을 중심으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한 결과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논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경남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 '습지생태계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논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물다양성 가치에 주목하기도 했다. 논에는 개구리와 메뚜기뿐만 아니라 조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 거미류, 어패류 등 4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군이 살고 있고, 작은 둅벙에도 수백, 수천 마리 이상의 작은 실지렁이, 깔따구와 같은 생물들이 살면서 생태계 순환과 생명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생물다양성에 있어 유기농의 역할과 중요성

스위스 유기농연구소의 메이더 박사는 2002년 연구에서 관행농에 비해서 유기농이 토양 미생물과 미생물의 활동이 더 활발하고, 균근류도 40% 더 많이 살고 있으며, 미생물과 지렁이의 양도 1.3~3.2배 높다고 보고했다. 홀과 퍼킨스 등의 연구(2005년)에서는 유기농이 숲쥐, 제방들쥐, 긴꼬리땀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의 활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리즈와 요크대학 연구팀의 2010년 조사는 유기농이 식물, 지렁이, 곤충, 나비, 새 등의 다양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12%의 생물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다. 또 뉴사이언티스트 2004년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Manitoba 대학의 농학자 마틴 엔츠가 전 세계 유기농과 관행농을 비교한 연구 결과 유기농이 세균에서 포유동물에 이르는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과학적 분석 없이도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증가한 사례는 우리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통해 메뚜기가 뛰어놀고 올챙이가 헤엄치며 황새가 찾아오는 논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생물다양성이 높아진 사례는 한살림 생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밥 한 그릇을 통해 우주 만물과 자연계 생명

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은 그 자체로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 한살림의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 생산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논살림위원회를 꾸려서 아이들과 함께 괴산과 홍천, 횡성의 생산지에서 논생물 다양성 조사 활동을 진행해 온 것도 그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생물다양성총회를 계기로 논생물 다양성 조사, 토종종자 보존, GMO 표시제 운동 등을 포함해 한살림의 농업살림운동 내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자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을 10년 연장.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2017년까지 시행되는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 중 2014년에는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로 확대운영됨. 이외에도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등 추진 계획.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2014년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2015년 말까지 한시적 허용 후 제도 확대 여부 결정).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며,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 증가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밭작물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식량지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 지급.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로는 청보리, 호밀 등 조사료와 겉보리, 쌀보리, 밀, 조, 기장, 감자, 고구마 외 20여 종.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아세안_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공공비축미곡 37만 톤, APTERR 공여용 3만 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기존에는 유통과정에 정보 전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축 유통 시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11) 대한민국 정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014년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중소규모 축사농가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유제품 공급을 위해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2014년 12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됨.

닭·오리 도축 정부 책임 관리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했던 가금류 도축검사에 대해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정부 검사관이 실시함.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인 과실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 지원 사업 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 추진.

인증제도별 표지(Logo)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 표지로 단일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관리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목욕탕 등) 지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 및 영업장 면적 규모에 따라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 급식 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 운영됨(2012년 22개소에서 2013년 100개소로 늘려 왔음.).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어린이·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소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매점과 우수 판매 업소에서 판매 금지, 특정시간대 TV광고를 제한.

정육점 등 육가공 기준 완화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 신설.

LMO 수입 및 국내 유통 등의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추진

안전성 심사 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제외국의 안전성 심사 규정을 분석해 선진화된 과학적 심사 기준 마련.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 개선

방문·다단계 판매비율(60%)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가'제도 개선. 시설, 품질관리인 선임 등 최소한 요건에 의해 허가함. 또한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어린이 기호식품 8품목 및 집유업 HACCP 의무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 사탕류, 빵, 음료 등 8개 품목에 HACCP이 추가로 의무화.(기존은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 축산물에 대해서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集乳업으로 확대 시행(제도 이름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적용범위를 기존 2종에서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늘리는 한편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함.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할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함.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포털 신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정보 제공.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효율적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네의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 마련.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제도 등 시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2014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 시작. 주요 하천 및 호수 등 약 60여 개 지점에서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3개 항목에 대해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국제사회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 확대·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산업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무분별한 어장 면허 연장 방지 및 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 시행, 이후 패류·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확대

폐전자·폐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텔레비전, 냉장고 등 현행 10개 제품에서 2014년부터 대형기기, 통산사무기기 등 5대 제품군 27개 제품으로 확대해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크게 강화함. 

전환이 희망이다

동학농민혁명 2주갑에 생각하는 생명운동의 길

-
1.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2. 동학, 19세기 제3의 길
 3. 생명운동, 동학의 환생
 4. 전환, 21세기 개혁의 길
 5. 셋이 모여 새로운 하나를 열다
-

1.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갑오 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나 이후로부터는 한울이 귀화(歸和)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성하리라.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 해월신사법설 [오도지운(吾道之運)]

전면적 봉기가 결국 참혹한 패배와 죽음으로 끝난 상황에서 동학의 미래를 묻는 제자의 물음에 해월 최시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94년 갑오년의 거사는 천명(天命), 즉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명이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억 수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인연이 모여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해

월은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전라도 고부와 무장, 금산 등에서 봉기를 하려 할 때,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때를 기다릴 것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5만 년 선천의 인연과 업이 쌓여서 분출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실패마저도 감당해야 한다고 결단합니다. 억조창생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해월의 피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갑오년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첫 번째 갑오년인 1954년은 한국전쟁 뒤끝,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두 번째 갑오년에 즈음하여 '우리의 길(吾道)'은 무엇일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과연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때"가 오기는 할까? '우리 도의 미래'를 묻고 있는 120년 전의 그 제자처럼 해안을 가진 선지식을 만나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과 충돌 때문에 동북아 역사의 분기점이 된 120년 전 청일전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엔 고객이 넘쳐나고 도시의 밤은 여전히 휘황찬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죽음 앞에서, 출세와 성공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많은 청년들이 기존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버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산업 문명과 자본주의의 머리카락에 가까이 선 한국사회는 이미 중환자입니다. 2,500여 년 전 공자의 한탄처럼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고,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합니다.

탈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탈학교, 탈노동, 탈도시, 탈종교, 탈물질, 탈정당, 탈자본, 탈국가... 여전히 대세는 돈과 권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귀농귀촌 인구가 이농 인구를 넘어서고, 무엇보다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일어나는 힐링 신드롬이 수상합니다.

동학의 그 제자처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에게 묻습니다.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2. 동학, 19세기의 '제3의 길'

폭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서구열강의 침략과 중화의 굴욕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백성들

이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우리의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밖에서 길을 찾고, 어떤 이들은 옛 것에서 답을 구합니다.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닌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에는 3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살 길은 옛 것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조선을 500년 동안 지탱해온 성리학적 질서, 중화적(中華的)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개화(開化)의 길입니다. 살길은 밖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꿈꿉니다. 일본이 역할모델이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해 일본의 힘을 빌려 이른바 ‘갑오경장’이 실시됩니다.

셋째,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길입니다. 동학은 19세기적 제3의 길을 대표합니다. 살길은 나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열망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삶과 사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재가녀(再嫁女)의 아들로 과거시험조차 볼 수 없었던 불우한 지식인 최제우도 전국을 떠돌며 ‘백성의 살길’을 찾습니다. 서구열강의 침략전쟁을 피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십승지(十勝地)와 궁궁촌(弓弓村)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리산과 계룡산 깊은 산골에 가면 장생(長生)의 비결을 찾을까 하여 이리 묻고 저리 수소문합니다. 그 모습을 수운 최제우는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매관매작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오
전국 쌓인 부침지도 일심은 궁궁이오
유리걸식 패가자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위심 하는 말이 내 옳고 네 그르지

유학의 경전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입산수도를 하기도 하고, 천주학도 공부하고, 장사도 해보고, 무술을 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거다 싶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내 개화나 수구가 아닌 개혁의 길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세상을 구하고 자신을 구할 후천개벽의 비결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1859년(그가 하느님체험을 하기 1년 전입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폐허가 된 고향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귀(歸), ‘돌아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吾心卽汝心)”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립니다. 아아,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10여년을 찾아 헤매던 궁궁의 비밀이 ‘내 안’에 있

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신비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재가녀의 아들로써의 차별은 그만의 아픔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의 아픔과 차별받는 여종의 눈물이 수운 자신의 아픔과 눈물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찾아 헤매던 궁궁촌은 '지금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내 안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장생의 비밀은 '그날 저기'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 있습니다.

궁궁은 내 안의 큰 생명, 거룩한 생명이었습니다.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만물이 서로 하나인 '한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개벽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나의 모습, 나와 너의 관계가 환골탈태, 애벌레가 나비되듯 완전히 새롭게 변화합니다.

내 안의 궁궁촌은 관념이 아닙니다. 수운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나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들끼리 '접(接)'이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적서와 남녀의 차별이 없이 서로 존대를 합니다. 유무상자(有無相資),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재산을 나누어 서로를 먹입니다. 일상이 굶주림이었던 이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평생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존대를 받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동학의 접 공동체는 이미 지상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접은 나라를 바로잡는 '보국(輔國)' 운동의 주체가 됩니다. 동학의 접은 수행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이자, 정치공동체였습니다. 전일적인 삶/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요컨대 희망은 나와 우리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 '함께 살림', '서로 살림'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마음, 곧 형제애입니다. 수운 최제우는 오심즉여심이라는 '하나됨' 체험을 통해 하나됨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표현이 접이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19세기 조선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역성혁명을 통한 왕조의 교체만으로는 백성을 편안케 할 '안민(安民)'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옛것에서나 밖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정척사파가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는 데서 살길을 찾고 개화파가 문을 열어 서구열강으로부터 부국강병의 비책을 찾으려 할 때, 수운은 우리 안에서 '오래된 미래'를 찾으려 했습니다.

개벽의 길, 19세기 제3의 길 동학이 2014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은 나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화두를 던집니다. '마음', '공동체', '개벽'. 한마디로 '생명'.

3. 생명운동, 동학의 환생

그렇습니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이전 동학 그 자체의 탄생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의 숨은 열망이 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길'의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생명운동 그 자체의 뿌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20주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걷는 동학'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무위당은 말 그대로 '생명운동가'였습니다. 생명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혹 쓰러질까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1990년 4월 12일 원주 호저 송골, 무위당 장일순과 김지하 시인을 비롯한 원주캠프의 동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112년전 송골에서 붙잡힌 해월 최시형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모비는 무위당과 원주캠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생명운동으로 되살아난 동학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평행이론입니다. 1860년대 초 동학의 포덕이 시작되고 30여년 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주갑이 지난 1980년대 초 생명운동의 태동하고 30여년 후 2014년 오늘 생명운동이 문명전환운동으로 새 시대를 엽니다. 동학의 환생이라고나 할까, '오심즉여심'이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되살아납니다.

전사(前史)가 있었습니다. '신생철학'과 '태인전투'가 그것입니다. 유신의 폭압이 맹위를 떨치던 1974년 부산대 철학교수 윤노빈이 새로운 삶의 철학을 화두로 던집니다. 생명사상으로써의 동학이 '생존'이라는 개념을 빌려 소개됩니다. 시인 김지하는 갑오년 동학혁명을 배경으로 혁명과 삶과 죽음의 숨은 뜻을 찾는 영화 시나리오(가제 '태인전투')를 구상합니다. 동학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기 전 눈 밝은 이들이 동학의 부활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1982년 민주화운동의 성지 원주에서 역사적인 문서가 발표됩니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일명 '원주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가톨릭 영성의 발에 동학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생명의 시대를 천명하면서 해월의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을 빌려 협동적 생존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서학과 동학이 만나 생명운동으로 거듭납니다. '생명'을 열쇠말로 사회운동의 대전환을 선언합니다.

"생명의 진리는 중도다." 원주보고서는 생명운동의 길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제3의 길'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과 지구생태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문명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산업문명의 쌍생아라는 것입니다. 동학이 그렇듯이, 제3의 길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절충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그날 아래 작은 나무가 태양을 좇듯 모든 생명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최적의 길이며, 꼬리칸과 머리칸의 2차원적 대결구도를 넘어서는 차원변화입니다.

이제 생명운동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일본과 대만의 협동조합과 유기농업을 배우고,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밑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탐색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1985년 6월 원주에서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 발족됩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86년 12월 서울에서 한살림농산이 문을 엽니다. 도농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이 '한살림'이란 이름을 얻고 걸음마를 시작한 것입니다. 120년 후 새로운 '집'이 만들어진 셈입니다.¹²⁾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동학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생명운동은 무엇보다 못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운동입니다. 농부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듯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갈 곳 없는 수배자를 보살펴주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깊은 하나됨과 형제자매애의 드러남입니다.

생명운동의 태동과 전개, 그 한가운데 무위당 장일순이 존재했습니다. 원주 생명협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박음신했 한편에 글씨 한 점이 눈에 뜨입니다. 1991년 신했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무위당이 쓴 글씨라고 합니다. "공생시도(共生是道)", 공생이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살림의 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간 지 20년, 생명운동가 무위당을 추억합니다. 아니 내 안에 살아있는 무위당을 모십니다. 동학이 살아있듯 무위당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옆으로 답례'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누구보다 해월을 사랑했고 또한 해월처럼 살고자 했던 무위당, 개혁세상을 열고자 했던 무위당, 그의 20주기에 즈음해 '음덕(陰德)'과 '축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원주보고서 30년, 생명운동은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생명운동(生命運動)[명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 생명평화결사, 한살림 등 기왕의 생명운동 단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년 전부터 생명평화 강령을 채택하였고, 시민사회운동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가톨릭의 생명운동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이들 종교계의 생명운동, 환경운동이 친근할 정도입니다.

이제 생명운동은 원주의 것도 아니고, 동학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한살림의 것도 아닙니다. 동학의 입장에서는 생명운동이 동학의 환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경전과 고전은 한결같이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고요. 생명운동은 모두의 것입니다. 생명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12) 그리고 3년 후 1986년에 원주보고서를 모태로 전일적인 생명공동체운동의 길, 문명전환의 길을 밝힌 한살림선언이 발표됩니다.

동학은 창도 후 30년 숨죽인 포덕활동 속 접이 만들고 이 땅의 천국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명을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억조창생의 열망을 대변해야 했습니다. 만국/만민/만물을 살릴 계획(活計)을 내놓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했습니다.

오늘 생명운동의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평화운동, 생명살림운동, 생명공동체운동, 생명문화운동 등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진 생명운동이 함께 모여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생명운동, 천주교생명운동, 불교생명운동이 더불어 뜻을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생명운동은 진정 우리 시대의 '활인기(活人機)'가 되어야 합니다.¹³⁾

4. 전환, 21세기 개혁의 길

다시 평행이론입니다. 동학이 경주에서의 '포덕' 선언 30여년 후 갑오년의 혁명을 통해 개혁의 길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려 했듯이, 생명운동도 원주에서의 '생명' 선언 30여년 후 오늘,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생명운동은 지난 30여년 각자의 현장에서 마음운동과 공동체운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해왔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사회적 전환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립적 삶을 일구는 생명운동,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만드는 생명운동,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생명운동을 사회와 함께 널리널리 펼쳐야 할 때입니다.

날개를 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고비원주(高飛遠走)'입니다. 생명운동은 이제 문명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과 사회를 예감하는 수많은 이들과 만나야 합니다. 가치의 전환, 삶의 전환, 문명의 전환을 위한 지렛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학과 서학이, 옛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컨대 동학의 하늘사람(天人)과 서유럽 대안운동의 나비혁명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1년 전 전라도 고부에서 만들어졌던 사발통문처럼 사회적 공모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새로운 삶과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환의 공모', '개혁의 공모'입니다. 영어의 공모, conspiracy는 '함께 숨 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기

13) 동학과 생명운동은 공동점이 많습니다. 동학도 생명운동도 무엇보다 권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생명에 천착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심의 깊은 마음에 기반한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만들기를 통해 삶과 사회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전일적입니다. 생활과 수행과 사회변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개혁, 혹은 문명전환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의 경로가 다릅니다. 동학이 수행공동체에서 시작해 생활공동체로, 다시 정치공동체로의 확장의 경로를 보여주었다면 생명운동은 생활공동체에서 출발해, 수행공동체로 깊어지고, 다시 정치공동체로의 확장을 탐색해야 할 터입니다. 물론 사람도 세상도 달라졌고요.

운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공모입니다. 아마도 사발통문은 전라도뿐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곳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의 생명운동, 삶의 전환운동이 곳곳에서 돌아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일구며, 농사를 지으며, 녹색평론을 읽으며, 생명평화 학교를 열며, 협동운동을 펼치며 기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보은취회 120주년 행사장 소년소녀들의 맑은 얼굴빛을 기억합니다.

바야흐로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20년 전 무장포고문처럼 큰 틀의 문명 전환운동을 세상에 알리고,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깊고 넓은 연대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현장과 지역공동체에 터하되 지역을 횡단하여 연결하고 또 펼쳐야 할 때입니다. 물론 갑오년 한 해의 봉기가 아니라 긴 호흡의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대전환운동이 절실합니다.

1) 문명전환 선언

문명전환은 왕조를 바꾸는 역성혁명도 아니고,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정치개혁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문명전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의식의 전환, 생활의 전환, 정치/경제시스템의 전환, 기술의 전환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전환운동은 개혁운동입니다. 예컨대 탈물질 정신문명, 탈도시 농촌문명, 탈자본 살림문명, 탈국가 공동체문명...

전환은 '중심이동'입니다. 옛것을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중심이동, 생활의 중심이동, 체제의 중심이동. 전환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탈바꿈'입니다. 전환운동은 새로운 삶 '일구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새로운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전환은 생태, 공동체, 영성을 키워드로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이행(transition)'입니다.¹⁴⁾

한국의 전환운동은 '방향전환'이면서 동시에 '이행'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실천을 동시에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압축성장인지도 모릅니다. 탈근대를 성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축성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내재된 '하나됨'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동학의 각지불이(各知不移)와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공동체성, 신명, 합일의 정신을 따로 또 같이, 창조적으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2)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적 비전의 제시

한국 가톨릭운동의 대부였던故정호경 신부님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

14) 서양에서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심이동(shift), 방향전환(turning), 이행(transition), 변형(transformation) 등으로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중심이동, 방향전환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만, 벌써 30여년 이제 '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니다.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함께 펼치셨던 수많은 선배 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호경 신부님은 생명운동을 '음(陰)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비전과 실천방안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입니다. '음개벽'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陽)의 패러다임에서 음(陰)의 패러다임으로 중심이동.

이미 많은 이들이 직감합니다.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상극에서 상생으로, 돈벌이에서 살림살이로, 사고파는(매매) 관계에서 주고받는(호혜) 관계로의 중심이동 말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강함에서 부드러움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중심이동. 다시 강조하거니와, 물론 '폐기'가 아니라 '중심이동'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권력의 행배가 중심이 되는 '양의 정치'에서 민생이 중심이 되는 '음의 정치'로, 돈벌이와 성장 중심의 '양의 경제'에서 살림살이와 행복 중심의 '음의 경제'가 요구됩니다. 1인1표의 기계적 민주주의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깊은 민주주의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의 '양의 시장' 및 '양의 화폐'에서, 필요의 충족이 중심이 되는 '음의 시장' 및 '음의 화폐'가 요구됩니다. 기계적 평등에 의한 '양의 재분배'가 아니라 각각의 형편을 배려하는 '음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전환이란 중심을 이동하여 균형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의 전일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양'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생명세계의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의 정치'란 다시 말해 '전일성의 정치(holistic politics)'이고, '음의 경제'는 '전일성의 경제학(holistic economy)'입니다. '평등과 정치경제학'과 '자유의 정치경제학'을 안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박애의 정치경제학'이 요구됩니다. 한살림선언은 자기실현,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를 사회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하늘, 땅, 사람을 아우르는 전일적인 비전을 시대의 언어로 정리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넘기'의 목표도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의 패권을 장악한 오늘날, 자본주의 넘기는 명확히 사회적 과제가 됩니다. 체제전환, 즉 시스템의 '진화적 재구성'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일대박론'은 역설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출구가 만만치 않음을 반증합니다. 생명운동의 선배들은 명백하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동시적 극복을 선언하며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끊임없이 탐색해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안운동은 '축소사회'를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운동의 체제적 대안도 본격적으로 토론되어야 할 때입니다.

3) 새로운 전략과 실행계획

생명운동은 무엇보다 연민입니다. 측은지심, 다른 존재의 아픔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웃과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생활을 바꾸는 삶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문명전환'을 선언한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과 실행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테면 120년 전 혁명적 거사를 앞두고 동학이 그러했듯이 공동체 중심의 '접(接)운동'에서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고 나아가 생명을 중심가치로 활동한 다양한 그룹이 함께하는 '포(包)운동' 전략, 큰 연대가 필요합니다.

포함삼교(包涵三敎)의 그 포입니다. 이때 포는 쓸어담는 포가 아니라 모시고 함께 가는 포입니다.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3.1운동이 그것입니다. 천도교가 중심에 서고 매개역할을 했으며 기독교와 불교와 더불어 함께 가는, 셋이 모여 새로운 차원의 하나가 되는 3.1운동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포운동'이 절실합니다. 특히 종교의 본원적 의미가 생명의 비밀을 찾는데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와 원불교 등의 종교단체들은 '생명'을 열쇠말로 하는 문명전환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 무기(?)는 도덕입니다. 동학에서는 전쟁무기를 '살인기(殺人機)', 도덕을 '활인기(活人機)'라고 말했습니다만, 도덕(道德)이란 고상한 담론이나 규범이 아니라 '가치지향과 어진 행동', 혹은 '새로운 의식과 생활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과 문화입니다. 생명운동은 문화로써 세상을 바꿉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 세상을 평화롭게 한 만파식적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활계(活計)의 비법이 됩니다. 동학의 접포는 이를테면 학습조직과 학습네트워크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길러내어 우리 시대의 활인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생명운동은 전사회적인 문명전환운동으로 날개를 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마을과 생산현장에서, 도시의 협동조합에서 종종걸음으로 살림을 꾸렸다면 이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5. 셋이 모여 새로운 하나를 열다

해월 최시형은 '궁을회문명(弓乙回文明)', 즉 '궁을이 문명을 바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궁을 혹은 궁궁은 동학의 부적이기도 합니다만, 마음의 악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의 비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궁을회문명이란 마음의 시대가 온다는 뜻일 수도 있고, 생명운동이 문명을 바꾼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120년 전 동학이 개혁의 열망을 사회혁명으로 확장했듯이, 생명운동도 문명전환을 선언하고 뜻을 모으고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물론 또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되므로 신중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인류와 지구의 대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 2주갑, 무위당 20주기를 맞이하며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는 5월 무위당 20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는 원주에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제2의 삼례집회 혹은 보은취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초들의 열망을 모아 전환의 이정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공주 우금치에서 '제2의 무장기포'를 시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혹한 패배의 자리에서 삶의 전환, 문명의 전환을 선언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을 향한 대전환운동의 플랫폼을 출범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동안 뿌려졌던 씨앗들이 새봄과 함께 싹을 틔우려 하나 봅니다. 경향각지 남녀노소의 마음과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4년 한국형 전환운동이 모습을 드러내려나 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조금씩 조금씩 전환의 마음을 나누었다면 올해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기포(起包)를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하나됨', 공심(公心)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땅속에 박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한 사람의 뿌리, 공동체의 뿌리, 지구의 뿌리, 생명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내 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박애와 사랑과 자비와 연대의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1919년 민족의 영혼을 일깨웠던 대사건이자, 새문명의 함성이었던 3.1운동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철학 같은 식민지 치하였으나 남과 북, 좌와 우, 마음과 몸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던 사회적 하나됨의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은 깊고 대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33인이,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아니 온 겨레가 서로를 공경하고 배려했습니다. 천지인 삼재가 하나가 된 삼일(三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촛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 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 〈기미독립선언서〉 중에서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1호

펴 낸 이 박맹수

펴 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펴 낸 날 2014년 2월 10일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1호

모심과 살림 연구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 동훈빌딩 5층
02)6931-3604 salim@hansalim.or.kr



재생증으로 만든 책